
기술금융 개선방안

2024. 4. 3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기술금융 문제점 분석	3
III. 개선방안	6
1.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 강화	7
2. 기술신용평가사의 독립성 강화	8
3.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11
4. 사후평가 강화	13
5. 기술금융 규율체계 정비	15
IV. 향후 계획	16

I. 추진 배경

□ 담보 및 매출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다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를 주기 위해 '14년 기술금융 도입

○ '14년 도입한 기술금융은 10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기술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



○ 기술금융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의 29%*로, 제조업 등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강화

* 전체 중기대출 1,041.4조원 / 기술신용대출(기술금융) 304.5조원

□ 기술금융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기술금융이 이제는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 은행자체 기술신용평가의 경우 데이터 정합성이 일정 수준 나타나 은행이 기술기업 대출에 활용할 수 있지만,

○ 외부 기술신용평가사의 경우 데이터 비정합성이 심각해 데이터 비정합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은행자체 기술신용평가 데이터와 비교하여 외부 기술신용평가의 데이터는 정규분포 미흡 및 특정등급에서의 쏠림 현상이 심각

□ 최근 감사원, 금감원도 기술금융 관련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존재

* (금감원) ❶ 평가자가 기술신용평가 예상결과를 은행에 사전 제공

❷ 평가자가 은행에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❸ 타인 자격증을 도용해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으로 평가

(감사원) 금리 및 한도 등 대출조건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대출실적을 한정하여 테크평가를 해야함에도, 우대가 없는 일반대출을 기술금융실적에 포함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기술금융 대상 판단부터 기술 신용평가 품질관리체계(사후관리)까지의 체계 운영



- ①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기업은 은행에 대출 신청
- ② 기술금융 대상 판단 후, 평가사에 기술신용평가 의뢰
- ③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은행에 송부
 - * 기술신용평가사(6개) 및 자체평가은행(10개)에서 표준기술평가모형으로 평가
- ④ 기술신용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여신 실행
 - * 기술등급 T6등급 이상 평가서를 참고한 여신에 대해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
- ⑤ 여신 실행 후, 여신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대출일, 잔액 등)
- ⑥ 평가 후, 평가결과를 신용정보원에 집중(발급일, 기술등급 등)
 - * 신용정보원은 기술심사 관련 정보(시장현황 등)를 평가사 및 자체평가은행에 제공
- ⑦ 신용정보원은 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신·기보 출연금 가감비율에 활용
- ⑧ 신용정보원은 반기별로 기술신용평가사 및 자체평가은행의 기술 평가품질 심사평가

II. 기술금융 문제점 분석

가. 기술금융 목적 달성 여부

□ 기술금융의 취지는 담보 및 매출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다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를 주기 위한 제도

○ 이를 위해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배점을 높여 신용대출 증가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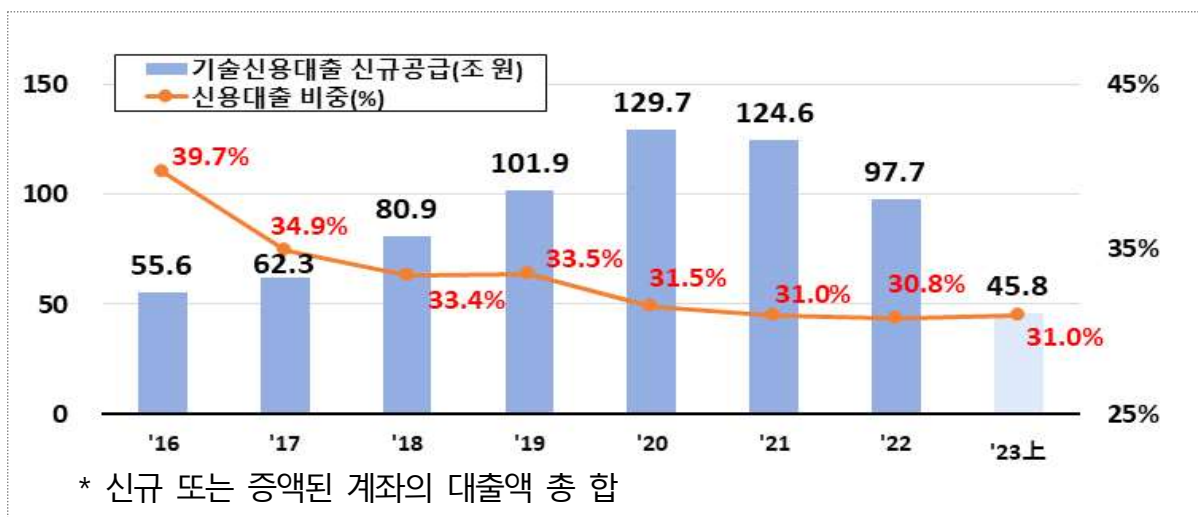
□ 기술금융의 목표인 기술기업에 대한 우대, 신용대출 증가 효과 등을 분석해 볼 때 미흡한 점이 있으며 질적인 도약이 필요

① 기술금융으로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지는 평가를 하지 않아 차주의 실제 금리혜택을 알 수 없음

* 그동안 은행들이 기술금융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T6 이상 평가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

② 신용대출 우대를 위해 '16년부터 테크평가 시 신용대출을 우대 (배점 중 20점)하고 있지만, 신규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지속 감소

<기술신용대출 신규공급규모 및 신용대출 비중>



▶ 기술금융의 원래 취지가 더 잘 구현되어 우대금리 제공 및 신용대출 공급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나.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기술금융 왜곡

□ T6등급 이상 대출이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은행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

① 기술금융 대상이 아닌 비기술기업에 대해서도 평가 의뢰

* 非기술분야 비중(표준산업분류 기준) : ('21) 24% → ('22) 15% → ('23) 8%

②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면서 평가사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요청
(기술금융으로 인정되는 6등급 이상 & KPI상 높게 인정되는 4등급 요청)

③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면서 여러 평가사들에 평가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고, 원하는 등급을 제공하는 평가사에 평가 의뢰

□ 기술신용평가사는 은행으로부터 보다 많은 평가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은행의 요구에 부응

①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생활밀접업종에 대해서도 기술금융인 것처럼 평가하여 평가보고서 발급

② 기술금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대한 등급을 주거나 기술금융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허위평가

* 기술금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에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전문자격증이 없음에도 전문자격증을 도용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

□ 비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가 이뤄지고, 등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기술금융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

* 기술평가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고 특정 기술등급에서 쏠림



▶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 강화

다. 기술금융 평가서의 질적 저하

- 기술금융의 양이 크게 늘어나 은행은 비용절감 등을 추진 → 기술평가의 부실화도 일부 발생
 - 일부 은행은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을 도입하고 수수료를 물량배정의 주요요인으로 고려
- 기술신용평가사 역시 은행의 의사결정에 맞춰 비용절감에 노력하면서 기술신용평가의 질적 하락도 발생
 - * 수수료 평균단가 추이 : ('14) 82 → ('17) 38 → ('20) 28 → ('22) 15만원
 - 비용절감 노력에 따라 기술신용평가서에 기업의 기술력 반영 등이 미흡하여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제기
 - * ① 평가보고서 작성 시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장실사를 생략
 - ② 평가보고서의 등급이 나온 상세 이유를 생략
 - 평가사는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평가 건이 증가함에도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추가로 채용 하지 않음
 - * 평가건수 추이 : ('19년) 24.6 → ('20년) 33.6 → ('21년) 39.8 → ('22년) 38.7만건
 - 평가사 전문인력 변동 추이 : ('19년) 111 → ('20년) 108 → ('21년) 113 → ('22년) 123명

▶ 기술신용평가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라. 평가 측면

- 기술신용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대한 우려에 따라 '22년부터 신용정보원은 기술신용평가서를 샘플링하여 품질을 평가
 - * 품질평가는 반기별로 진행되며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로 분류해 통보
- 신용정보원의 품질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평가사가 이를 개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문제 개선에 소극적 대응
 - * ('23.上 결과) 평가사 : 보통5, 미흡1 / 자체평가은행 : 우수6, 보통2, 미흡1

▶ 품질평가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기술신용평가사들이 이를 적극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 필요

III. 개선방안

- ◆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려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여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주요과제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 금융지원 강화

추진과제	세부과제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금리 명확화 · 기술금융 관련 신용대출 확대 유도
평가의 독립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과 평가사간 균형과 견제 · 은행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 은행의 양적확대 경쟁 유인 방지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토록 개편 · 관대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
사후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 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
기술금융 규율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행위규칙 정비

1.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 강화

- ◆ 기술기업이 기술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명확화
- ◆ 기술력에 따라 신용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

1) 우대금리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기업들은 기술금융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음
 - 현재, 기술등급에 따라 지점장이 재량으로 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지만 실제 금리가 낮아져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개선)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 금리인하를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개선
 - 은행은 기술등급별 금리인하 폭을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 실행 후 금리 정보* 및 대출 잔액 등을 신용정보원에 집중
 - * ①기술금융 취급 前 금리(최초금리), ②기술등급 우대금리, ③실행금리 모두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기술금융으로 어떤 우대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
 - 은행 테크평가 시 기술등급별로 더 높은 금리인하를 한 은행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
 - * 기술등급 구간을 나눠 각 구간의 금리 제공정도를 측정 및 점수 부여

2) 신용대출 확대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기술금융 대출(잔액기준) 중 신용대출 비중*은 일반 중기대출보다 다소 높은 편이나,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 추세
 - * 기술금융 대출(잔액) 중 신용대출 비중(%) : ('21) 24.2 → ('22) 23.1 → ('23) 22.4
일반중기 대출(잔액) 중 신용대출 비중(%) : ('21) 11.3 → ('22) 11.2 → ('23) 11.8
- '19년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신용대출 배점을 상향 조정(15점 → 20점)한 후, 하락세는 멈췄지만 반등세를 보이지는 못함
- (개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취급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담보위주의 여신 관행 개선(현행 20점 → 가중치 상향 조정)

2. 기술신용평가사의 독립성 강화

- ◆ 은행과 평가사간 균형을 맞추으로써 평가의 내실화 도모
- ◆ 은행이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정비

가.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간 균형과 견제

1) 저가입찰 유도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은행은 매년 평가사의 수수료 및 은행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사별 연간 물량 배정**
 - 일부 은행이 평가사별 물량배정에 수수료를 핵심요인으로 반영*함에 따라 기술평가의 부실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 * 평가항목 : 수수료(30~50%), 자체 품질평가(20~30%), 업무협조도, 영업점 설문조사
- **(개선)** 은행의 평가사 물량배정 기준은 평가품질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물량배정 기준을 투명화
 - ① 물량배정 시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활용
 - 은행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품질심사평가를 신용정보원에서 운영중인 품질심사평가로 **일원화**(우수-보통-미흡등급으로 평가)
 - 은행과 평가사가 함께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역량 강화**
 - ② 은행은 신용정보원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각 은행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물량배정 기준 수립
 - 다만, 각 은행의 물량배정 기준에서 수수료는 제외하고, 평가 물량 배정 기준을 평가사에 사전 제공
 - * (예시) 평가 시 미흡등급을 받은 평가사에 물량의 일정부분(15% 이상) 배정 금지
 - ③ 은행의 물량배정 기준 수립과 평가물량이 기준에 따라 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테크평가에서 사후적으로 점검**
 - 물량배정 기준 투명공개 및 평가품질이 물량배정에 반영됨에 따라 평가사는 평가품질 제고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

2) 기술금융 신청 시 지점의 영향력 배제

-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 은행은 지점이 본점에 기술금융 신청
→ 본점이 평가사 2~3개 랜덤 추천 → 지점이 평가사를 선택
 - * 본점은 평가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전에 물량을 배정하고, 지점이 신청할 경우 사전에 배정한 물량에 따라 랜덤으로 지점에 평가사 추천
- 다만, 일부 은행은 본점이 아닌 지점에서 평가사를 직접 선택
 - 지점에서 평가사를 선택할 경우, 평가사는 물량 확보를 위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주겠다고 암시하면서 은행 지점에 영업
 - 또한 지점은 기술금융 실적을 위해 수수료가 낮고 비교적 관대한 평가 등급을 주겠다는 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할 유인 증가
- **(개선)** 평가사 선정을 본점에서 지점에 랜덤으로 2~3개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통일하여 평가사를 지점의 영향으로부터 독립
 - 본점에서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도 은행 물량배정 기준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빈도를 조정
 - * (예시) A은행의 물량배분이 우수(40%), 보통(40%), 미흡(20%)인 경우 : 지점이 본점에 신청 시 본점은 10번 중 2번의 빈도로 미흡평가사를 지점에 추천

나. 은행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은행이 기술신용평가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할 제도적 근거 부족
 - * (은행) 사전등급 문의 → (기술신용평가사) 예상등급 사전제공 + 관대한 평가 암시
- 신용정보법은 은행의 행위규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은행의 요구를 따른 평가사에 대해서만 처벌조항 규정
- **(개선)** 은행이 평가와 관련해 평가사와 평가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은행이 평가사에 사전에 등급을 문의하거나, 관대한 평가등급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상 근거 마련

다. 은행의 양적확대 경쟁 유인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T6등급 이상 평가서만 참고하면 기술금융 실적
으로 인정되므로 비기술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신용평가를 의뢰

○ 비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이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22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기술금융 대상 규정

- 가이드라인 시행 후 非기술기업의 기술금융 이용이 감소 중이나,
여전히 병·의원 등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이용

< TCB 평가건수(全 업종, 생활밀접업종)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TCB 신규평가 건수(만건)	24.6	33.4	39.5	38.7	30.3
생활밀접업종 건수(만건)	2.3	4.8	5.5	4.0	2.5

○ 기술금융 대상이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지만 대상을 포괄적
으로 정의*하고 있어 은행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여지 존재

* (예시) 現 가이드라인에는 중분류인 광고업(713)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기술 연관성이
없고 광고용 설치물 임대 성격의 옥외 및 전시광고업(71391)도 기술금융으로 의뢰

□ (개선)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의뢰하지 못하도
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사후평가를 강화

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술기업의 분류를 중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구체화함으로써 기술금융 신청 대상을 보다 명확화

- 특히, 최근 은행들이 많이 의뢰한 비기술기업 업종은 기술
금융대상에서 명확하게 배제

* ①제조매출이 주인 "광업" 추가, ②업종 구분을 중분류~세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구체화, ③기업의 기술력과 무관한 상표권 및 전문인력 근거 취급 조항 삭제 등

② 은행에 대한 테크평가 시 비기술기업에 대한 평가서 발급사례가
확인될 경우 감점 처리

3.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 ◆ 평가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평가 시 필수 평가사항 마련
- ◆ 평가사가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가. 기술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토록 개편

1) 현지조사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기술신용평가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이므로 신규평가 시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함
 - **(신규평가)** 평가사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규평가임에도 자체적으로 현장실사 생략 → 유선상으로 평가 진행
 - * 신규평가 : 기존 평가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평가, 유효기간(1년) 경과 3개월 후 평가
 - **(재평가)** 재평가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평가
 - * 재평가 : 유효기간(1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평가
- **(개선)** 평가서의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의무화
 - **(신규평가)** 신규평가의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현지조사를 사실상 의무화
 - * 천재지변 등으로 현장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 **(재평가)** 기존 평가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 조사표*를 신설하고 조사표를 활용한 경우 현지조사 생략 가능
 - * 회사와 함께 인력, 매출, 사업구조 등 지난 평가때 조사했던 현황과 달라진 사항을 정리한 표로, 재평가에는 의무적으로 활용

2)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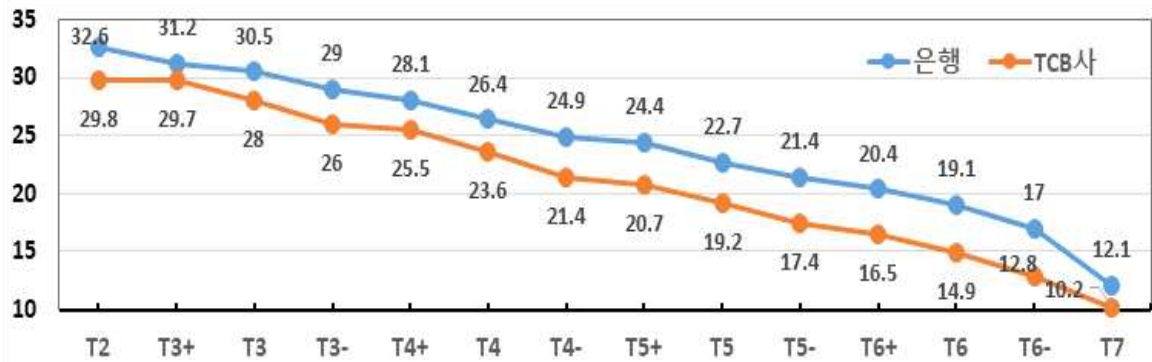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평가 시 등급산정 이유를 항목별로 기술한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세부평가의견을 평가요소에서 생략하고 있어 등급산정 근거를 알기 어려워 평가의 질이 낮아지고 확인이 어려움
- **(개선)** 평가 결과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나. 관대한 평가를 방지하는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은행자체 기술신용평가와 비교해 외부 기술신용평가사의 경우 관대한 등급을 주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지적

- 정량평가 점수가 낮음에도 정성평가 점수를 올려 기술등급을 인위적으로 상향하는 일부 사례 발견 → 데이터의 신뢰성 저하
- 자체평가은행보다 정량점수가 낮음에도 동일한 기술등급을 받은 것은 평가사에서 정성점수를 상향하여 관대하게 평가했음을 의미
- * 기술평가모형은 정량 36점, 정성 64점으로 구성되어 평가자 의사가 크게 작용

< 은행-TCB사간 등급별 정량평점 비교('23.상 기준) >



□ (개선) 기술신용평가사가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평가의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평가 가이드스를 도입

- 등급산출 가이드를 마련하여 정성점수를 과도하게 상향하여 평가 결과를 관대화하는 행위 방지
 - 특정 등급에 대한 정량점수 하한치 기준을 마련하여 기술 등급 판정기준 보완
 - * (예시) T6등급의 경우 정량점수가 12점 이하일 경우 평가 불가
-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와 AI기술을 활용하여 평가등급을 가이드해주는 가이드스 모델 개발 추진
 - AI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기술등급을 제시하고, 평가자는 활용하고 평가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4. 사후평가 강화

- ◆ 평가사 품질심사평가 기준 변별력을 높여 평가결과 세분화
- ◆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기술금융의 질적성장 유도

가.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평가 강화

- **(현황)** 신용정보원은 반기별로 기술신용평가사의 평가보고서를 임의로 샘플링하여 평가사의 품질보고서를 평가
 - 품질심사평가는 품질조직 등 규정 준수에 대한 정성평가와 평가서수준에 대한 정량평가로 구분
 - * 정성평가 : 품질조직 등 품질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적정 / 부적정으로 평가
 - 정량평가 : 평가서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미흡, 95점 이상일 경우 우수
- **(문제점)** 정성평가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적정으로 평가되므로 품질관리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
- **(개선)** 정성평가를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정량으로 통합해 점수제로 운영
 - * 모든 항목을 계량화 하여, 총 점수 80점 미만 미흡, 90점 이상은 우수 부여
 - 품질평가서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샘플링 확대(10→30건)

< 심사기준 개편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심사 기준	판정
규정화 등	규정화 및 품질관리책임자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 수립 및 관리책임자 운영	정성 → 정량
품질요건	인력요건		전문인력요건 및 검수자 비율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 체계		조직 체계, 검수자 실명제 실시, 검수이력 관리 등	
	모형관리	모형관리	가이드라인의 모형관리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준수	
		모형안정성	등급 분포도 및 집중도 심사	
평가서수준 (샘플링 확대)	평가등급	등급집중	(평가 결과가 특정 등급에 쏠림현상이 있는지 검증)	정량
		등급정확성	평가등급 정확성 심사(평가등급 산출 오류 검증)	
	평가의견품질	등급적정성	평가등급 적정성 심사(평가서 세부 의견 검증)	
		기술금융 적합성	평가의견의 전문성 중심 심사 기술금융 대상 적정성 여부	

나. 평가서에 대한 평가를 인센티브와 연계

□ (현황)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대출 잔액을 한은 금융중대 대출실적에 반영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정부부처 사업에 활용 중

○ 한국은행은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대출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에 반영하여 시중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 제공

※ '23.7월 기준, 기술형창업기업지원(기술신용평가를 받은 창업기업에 지원한 만기1년 내 대출)으로 금융중대 지원 실적에 반영되는 대출잔액은 총 10.2조원

○ 평가결과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평가사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사업재편기업* 평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활법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
→ 사업재편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기술신용평가사가 사전에 심사

□ (문제점) 품질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지만 패널티가 없어 평가사는 품질개선 노력에 소극적으로 대응

< 그간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

- ('22.上 결과) 평가사 : 미흡6 / 자체평가은행 : 우수6, 보통3
- ('22.下 결과) 평가사 : 보통3, 미흡3 / 자체평가은행 : 우수6, 보통2, 미흡1
- ('23.上 결과) 평가사 : 보통5, 미흡1 / 자체평가은행 : 우수6, 보통2, 미흡1

□ (개선) 우수·미흡 평가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공시) 신용정보원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반기마다 외부 공시

○ (인센티브) 사업재편기업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평가사를 현행 보통등급 이상 평가사에서 우수등급 평가사로 축소

○ (패널티) 미흡등급을 받은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실적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에서 제외

- 미흡평가사의 평가 잔액 제외 시, 은행은 품질심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평가사에 물량을 더 많이 의뢰할 것으로 예상

5. 기술금융 규율체계 정비

◆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기술금융의 규율체계 정비

- **(현황)** 신용정보법은 평가사의 행위규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행위규칙 위반 시 과태료 및 신분제재 부과 가능

* 신용정보법 제2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 **(문제점)** 신용평가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함에도,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움

- 평가사는 타인의 자격증 등을 도용하여 기업이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하여 기술금융으로 취급(금감원 검사)
- 평가사가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규칙을 위반 하더라도 기술신용평가 업무 수행 가능(감사원 감사)

- **(개선)** 신용정보법에 규정된 행위규칙을 정비하고, 중대한 행위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기술평가 업무규범을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행위규칙 정비 및 과태료 등의 제재근거 마련*

* (예시) ①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여 허위평가, ②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 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행위규칙에 추가

-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결과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은행의 행위규칙도 신용정보법에 규정(전술)

- 행위규칙 중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행할 경우, 허가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예시)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허위평가 행위 등

IV. 향후계획

□ 제도적 정비사항은 금년 중 완료 추진

- 신용정보원의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정비를 완료 (전산 관련 사항은 전산개발 등을 고려해 연내 시행)
- 신용정보법 개정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중 국회 통과 추진

구분	조치내용	조치사항	조치기한
기술금융의 취지 강화	우대금리 명확화	테크평가 매뉴얼 개정 신정원 전산 연계	'24.上
	신용대출 확대 유도		'24.下
평가의 독립성 강화	평가물량 배정기준 마련	은행 시스템 마련	'24.上
	평가사 선택 랜덤		
	은행 행위규칙 마련	신용정보법 개정	'24.下
	기술금융 업종 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24.上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현지조사 의무화	가이드라인 개정 전산 연계	'24.上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24.下
	정량평가 기준 마련	표준기술평가모형 개정	'24.上
	AI 가이드스 개발	가이드 마련	'24.下
평가 강화	평가사에 대한 평가강화	품질심사평가 매뉴얼 개정	'24.上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금중대 규정 개정 (한국은행)	완료
규율체계 정비	평가사 규율체계 정비	신용정보법 개정	'24.下